투데이 칼럼

약산 김원봉 선생의 삶, 재조명 됐으면

곽 보 경

여행작가 겸 칼럼니스트

사실 나의 본업은 여행작가다.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러시아 방문이다.

하바롭스크에서 며칠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열차(1박)로 블라디보스토크 이동하여 후배도 만나고 몇달간 뜸했던 여행스케치도 하면서 며칠 머물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으로 하바롭스크행 러시아 국적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를 실은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륙하더니 이내 북한 영공을 관통해서 날아간다. 대한민국 국적기는 북한 영공을 우회해서 가지만 러시아 국적기는 북한 영공을 관통한다는 사실에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요즘 회자되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논란까지 겹치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해방후 약산 김원봉 선생이 친일 반민족자들의 득세로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북으로 가야만 했던 역사가 야속하다. 하기야 여운형 김구 마저도 암살된 남한에서 그가 살아남았지도 의문이다.

그는 북에서 외세에서 벗어나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중립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는 625의 원흉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한 주역이다. 결국 그로인해 북에서조차 김일성파에의해 숙청당했으니 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다. 그가 마지막 눈을 감으며 떠올렸을 삶의 회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는 북에 있으면서도 외세에 간섭없는 중립화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결국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어 언제 어떻게 죽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북에서도 제대로 평가되거나 복권되지 못했다.

조소앙 선생은 김원봉선생과 북한내에서 비슷한 활동과 비슷한 최후를 맞았다. 차이가 있다면 조소앙 선생은 625당시 납북되었고 김원봉 선생은 반민족극우세력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원치 않는 월북행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대우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조소앙 선생은 북한 애국열사릉에 묻혀있을 뿐 아니라 남에서는 건국공로훈장을 받았고 북에서는 조국통일상을 받았다. 남북 모두에서 독립운동을 인정받았다.

조소앙 선생의 사례로 볼 때 김원봉 선생을 대한민국에서 복권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를 복권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정통성을 가졌음을 더욱 완벽하게 해줄 것이다. 이념으로 상처입은 독립운동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면에서 남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삶을 지금이라도 재조명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꼭 살고싶었던 해방된 조국을 선물받은 후손들이 갚아야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그리고 약산 김원봉선생 논란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경력이 불거졌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삼을 생각이 없다. 애국에는 좌익도 우익도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말이다.

기고문

댐건설법 개정(안) 탁상공론… 이대로 좋을까?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환경부 소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댐건설법)이 심의 중에 있다.

제안이유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명분아래,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강화를 통한 수자원 활용 극대화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원래 댐건설법의 적용범위(대상시설)는 환경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 생활용수, 공업용수, 홍수조절용 댐으로 대규모 댐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총저수량 50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우려가 예상된다.

농업용 저수지는 10년에 한번 오는 가뭄에 대비하여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관개 용수량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전국에 1만7천여개소가 산재하고 저수지 관리에 특별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농업환경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는 가뭄이 일상화되어 최적의 규모로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는 매년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일상적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에도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 생산은 매년 풍년을 이루어 왔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분야의 수자원 계획과 농업용수 관리기관(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의 체계적 용수·시설관리와 농업인의 농업용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3위 일체가 되어 이룰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용수관리 주무 부처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이용 효율화와 농업용 저수지 기능개선 을 내용으로하는 농업·농촌부문가뭄대응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2015.12)에서 보고했고,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은 1908년부터 시작된 수리조합의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체계적 관리해 왔으며, 경험적 노하우를 쌓아왔다.

농업인은 지역 물관리 협의체(흥농계)를 구성하여 저수지 건설비를 부담하였고, 정부의 수자원 정책과 농업용수관리기관의 용수관리계획에 따라 부족한, 한정된 농업용수를 협의하여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의 무상사용과 정부, 물관리 기관, 농업인 등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 쌍방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용수의 사용목적, 저수 용량의 최적화, 하천수계의 범위, 관리체계, 수리관행, 기득수리권 등 특수성이 있다.

현재, 댐건설법의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공업용수댐은 유상 사용과 물관리 기관의 일방향 주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용수의 사용 목적, 저수 용량의 대규모화 등 농업용 저수지와 특성이 다르다.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용 저수지와 댐건설법의 다목적댐은 소관부처별 수자원계획, 사용목적, 관리체계, 기득수리권, 수익자 비용 부담 등 수자원계획 및 관리특성이 너무나도 상이하다.

이처럼 관리계획과 시설 특성이 상이함에도 물관리 일원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에 기름을 섞는 격이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해이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실패이다.

다시 말하지만, 농업용저수지는 1908년 수리조합을 효시로 111년 동안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각 소관부서의 시설 특성을 직시하고,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적용범위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개정안 마련을 요구한다.

230만 농업인과 수자원 관련 종사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정광교 농어촌공 익산지사 고객지원부

사 설

전북 인구의 전주권 집중화도 고민의 대상

전북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먼저 인구 감소를 고민해야겠다. 정부가 군산을 위기 특별지역으로 거듭 지정했지만 피부에 느껴지는 효과라는 게 미미하다. 그 때문에 군산 지역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유출 현상도 여전하다. 전북의 인구가 하릴없이 줄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도내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나마 조금은 괜찮다는 전주도 자체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다. 아직 수도권으로 이사갈 여력이 없는 이들이 전주권으로 모여드는 추세라 인구 감소 느낌이 둔화되고 있을 뿐이다.

전북의 인구가 늘면서 전주권이 커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정작 전주 시민들은 줄고 있는데 전주권의 집중화로 인구 감소 느낌이 둔화되고 있음은 곤혹스런 일이다. 그러는 중에 시군들은 큰 폭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북도는 그걸 도민들이 믿어도 되는지 확인해줄 일이다.

도지사가 지금 모든 일정을 접어두고 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쏟아져 나올 여러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 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안 좋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음에도 고민을 덜 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하나 하나 해결책을 모색했다면 답변이 궁하지는 않을 터인데 말이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자존을 말하고 제몫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그 곤란한 일이란 바로 인구 감소의 연속이다. 지금 전북도가 이루어낼 목표는 뚜렷하다. 군산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해야 한다. 시군 간 소득 격차도 좀더 줄여나가야 한다. 그게 잘 안 된다면 도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올해만 해도 지역 인구 수천 명이 유출됐다. 도의원들의 질책성 질문이 아니라도 전북도와 도지사는 인구 감소를 두고 늘 긴장해야만 한다.

전주시의 구도심 사업, 속도감이 없다

전주시에 물어볼 것이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도청사 공터에 전라 감영을 복원하는 등 애를 쓰고 있지만 그밖의 구역들은 변화의 기미가 없으니 하는 말이다. 전주시가 밝힌 플랜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 등 인구 유입 효과가 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싱겁다. 청사진 발표와 달리 별다른 진척이 없는 까닭이다. 최근에 보도된 뉴스를 보면 시장이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학동 예술촌을 변모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다. 그나마 그것도 예전에 약속했던 것의 재탕이라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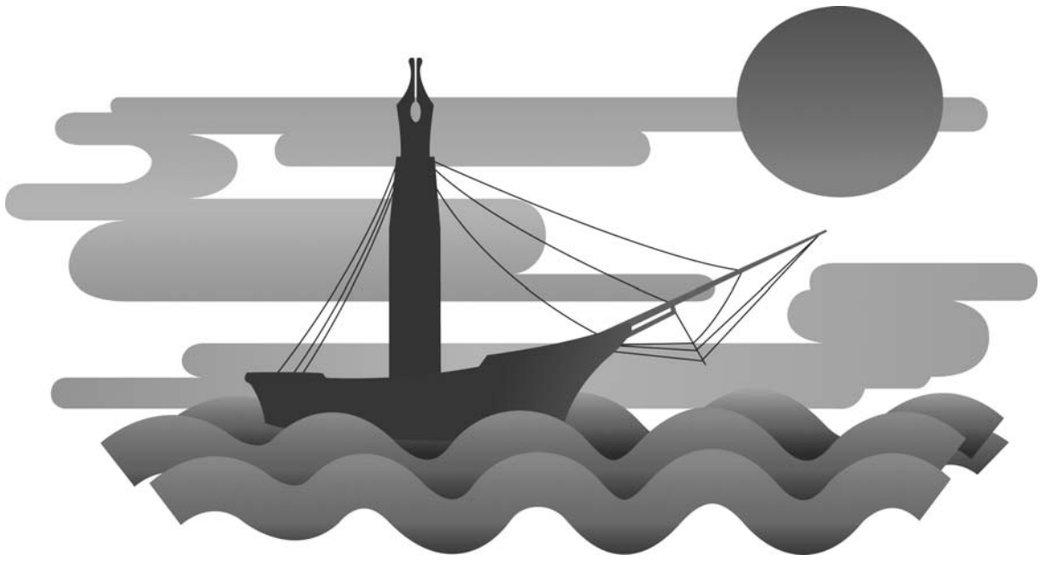
전주시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날 천명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구도심을 문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말 잔치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시일이 어느만큼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그처럼 일의 추진이 더딘 것인지 답답하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여러 차례 공표했으므로 박력있게 속도를 내야 한다. 방침을 호기있게 밝혔으면 일의 추진도 그래야 한다. 뜸 들이는 식으로 길게 끌지 말라는 당부이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 힘차게 속도를 냈으면 한다. 앞으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만의 성찬 반복돼선 안 되겠다. 전주시는 도시공간 재창조도 천명했으므로 실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작업에 힘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의 환경이 어떤지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청에서 가까운 서노송동 지역만해도 폐가가 많다. 도로에서는 폐가들이 안보여도 높은 빌딩에서는 흉물스런 모습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달라진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의 역사가 오래인데 지금 진척이 너무 느리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